

**제 목 :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 
「자산유동화법 개정안」 국무회의 통과**

- ◆ [추진경과] '21.10.12.(화) 국무회의에서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의결 →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
- '20.5월 「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」의 후속조치
- ◆ [주요내용]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, 리스크 관리 강화
-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,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, 등록절차 간소화
-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,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

1 | 개요

- ☐ '21.10.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산유동화법')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- ☐ 이는 '20.5월 발표된 「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」 후속조치로서,
  -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,

\* '98년 자산유동화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, 그동안의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대기업(주로 통신사·항공사) 외에는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

-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\*를 해소하여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.

\* 금융당국 등록 없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, 유동화증권 발행의 기초가 된 자산의 부실위험에 대한 규율이 미비

## 2 개정안 주요내용

### [ 자산유동화 관련 주요 개념 ]

- ✓ **(자산유동화)** 금융회사,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
- ✓ **(자산보유자)**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하는 자(일반기업, 금융회사 등)
- ✓ **(유동화전문회사)** 자산유동화의 도관체로 이용되는 특수목적회사(SPC)로서,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주체
- ✓ **(자산관리자)**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
- ✓ **(등록유동화 증권)**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금감원에 자산유동화계획 등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

## 가.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

### ①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 (안 제2조제2호)

- **(현행)**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(BB등급 이상)\*을 두고 있어,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.

\*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'자산'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,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

- **(개선)** 신용도 요건을 폐지\*하여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\* 단,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'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'로 제한 예정(하위 규정에서 구체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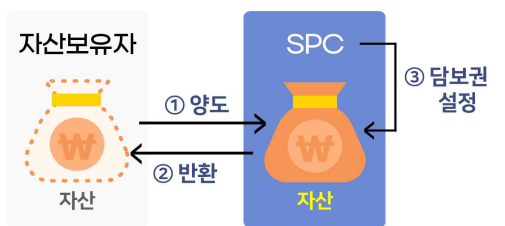
## ② 유동화 대상자산 및 구조 다양화 (안 제2조제3호, 제3조제2항)

- **(현행)** 유동화 대상자산을 “채권·부동산 기타의 재산권”으로 정의하고 있어, 장래자산·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.
- 또한, 복수의 자산보유자(유동화증권 발행기업)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.
- \* 다수 기업의 매출채권·회사채 유동화시, 단일 자산보유자 역할을 위해 증권사가 채권을 매집 → 저신용회사 채권매집 회피, 높은 수수료 요구 등으로 활용도 저조
- **(개선)**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,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‘장래에 발생할 채권’, ‘지식재산권’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,
-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\*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multi-seller 유동화 허용

## ③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(안 제6조)

- **(현행)**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,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.
- **(개선)** 유동화전문회사(SPC)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(의무→임의)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.

### < 주요 개선내용 >

자산보유자	구분	개선내용
	① 자산보유자 → SPV	현행 유지(의무등록)
	② SPV → 자산보유자	의무등록→임의등록
	③ 제3자에 담보권 설정	의무등록→임의등록

- \* ② SPV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: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
- \* ③ SPV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이 담보권(질권·저당권) 설정 : 법률상 실익 無 (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)

#### ④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(안 제10조, 제11조)

- **(현행)** 자산유동화법은 자산관리자의 유형을 3가지\*로 한정하면서, 「신용정보법」상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신용조회,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.

\* ①자산보유자, ②전문자산관리회사, ③「신용정보법」상 허가를 받은 자

- 자산관리는 채권추심 업무와 주로 관련 있으므로\* 신용조회·신용조사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\* 채무 변제요구, 담보물 경매신청, 임대료 회수 등 채권추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

- **(개선)**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업 허가\*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.

\*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허가제로 운영중

- 다만,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·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,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「신용정보법」상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# ⑤ 「자산유동화법」상 인센티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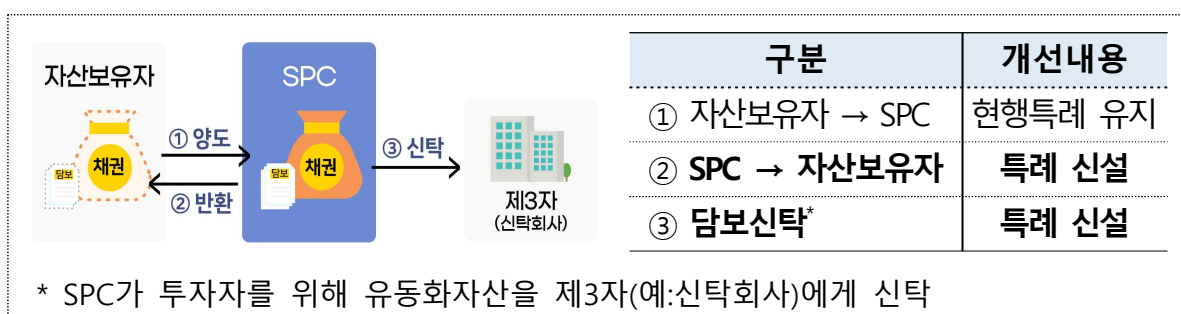
- **(현행)**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\*는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이나, 특례 정비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.

\* 채권양도 대항요건 간소화(§7), 저당권등 취득 특례(§8), 이익배당·자본변동 특례(§30) 등

- **(개선)** 담보권(질권·저당권) 취득 특례\*의 범위를 확대하여, 질권·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. (안 제8조)

\*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·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(기초자산)을 양도하는 경우,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·저당권 취득

#### < 주요 개선내용 >



- 유동화전문회사(SPC)의 법적 형태를 **주식회사까지 확대<sup>1)</sup>**하고,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**면제<sup>2)</sup>**됨을 명시하였습니다. (안 제17조, 제30조)
  - \* <sup>1)</sup> (현행)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 → (개선)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(상법상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제가 폐지('09년)됨에 따라 주식회사도 SPC로 활용 가능)
  - \* <sup>2)</sup> (현행)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부담 → (개선) 명목상 회사(paper company)에 불과하므로 자본금 결손 보전 목적의 이익준비금 불필요
- 기초자산 관련 정보(채무자 정보)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. (안 제37조)
  - \* (현행) 투자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초자산(채권)채무자의 지급능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제3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(§4) 적용 배제 (개선) 신용정보법상 유사한 규정(§32, 33 등)도 적용을 배제하여 불확실성 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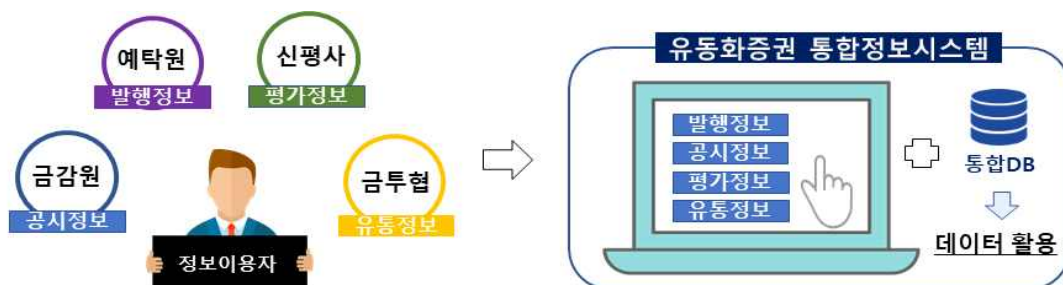
## 나. 리스크 관리 강화

### 1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(안 제33조의2, 제42조)

- **(현행)**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·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,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**임의공시\***로 운영되고 있어 **중요정보 누락, 부정확한 정보 공시**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.
  - \*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동화증권 예탁·전자등록시 발행정보 등을 수집·공개
- **(개선)**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\*를 공개토록 하여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(위반시 과태료 부과).
  - \* (예) 발행내역(발행금액, 만기 등), 거래참여기관 정보(자산보유자, 실질 자금조달자, 자산관리자 등), 기초자산 정보, 신용보강 정보 등

※ 「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bro.or.kr)」 구축·운영(예탁결제원, '21.1월~)

-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유동화증권의 '발행·공시(등록유동화)·유통·신용평가 정보'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**단일 플랫폼** 구축



## ② 자산보유자의 위험분담 의무화 (안 제33조의3, 제38조의3 등)

○ **(현행)** 자금조달주체인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되므로,

-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자산을 유동화에 제공하거나,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에 소홀할 유인이 존재하였습니다 (투자자와의 이해상충).

○ **(개선)**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,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(5% 수준의 지분 보유)토록 하였습니다.

※ 미국·EU·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既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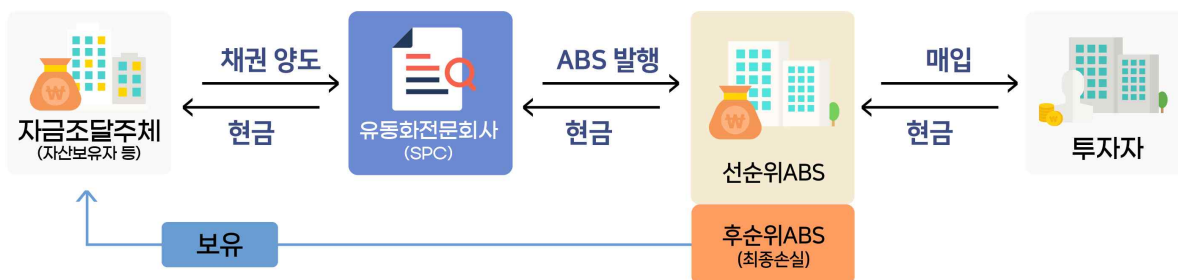
- 다만,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,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\*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합니다.

\* (예)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(MBS),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100% 커버하는 단말기할부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

-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고,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\*토록 하였습니다.

\* 고의·중과실로 위험분담 규제 위반시,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5% 범위(20억원 한도)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

### < 위험분담 예시 : 자금조달주체가 후순위채권 보유 >



※ 규제 면제·완화 대상, 위험분담 방식, 위험분담 정보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예정

-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자산유동화법」 개정안은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-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·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

□ **(개념)** 금융회사,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\*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

\* 유동성이 낮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출채권, 매출채권, 정기예금 등

□ **(구조)**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(또는 신탁회사)에 보유자산을 양도 (또는 신탁)하고,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

○ **(유동화자산)** 현금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모든 재산은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활용 가능

○ **(자산보유자)** 유동화자산을 보유하는 일반기업, 금융회사 등을 의미

○ **(유동화전문회사)** 유동화의 도관체로 이용되는 특수목적회사(SPC)로,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

\* 유동화전문회사(SPC)는 실체가 없으므로 유동화자산 관리, 일상적인 사무를 각각 자산관리자, 업무수탁인에 위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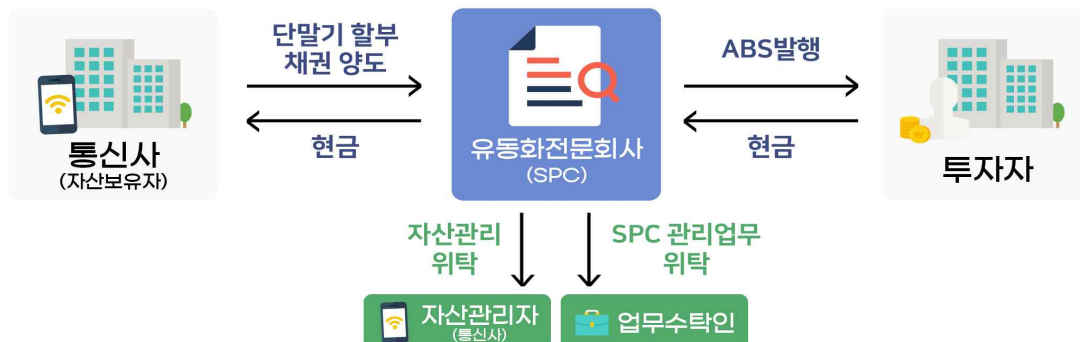
○ **(투자자)**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고 향후 발생하는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으로부터 원리금 등을 수취

○ **(신용보강)** 경우에 따라 자산보유자의 후순위채권 매입, 공공 기관·금융기관의 보증 등 신용보강이 이루어 짐

□ **(방식)** 자산유동화법상 특례\*를 적용받기 위해 금감원에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후 발행하는 ①등록유동화, 그 외의 ②비등록유동화로 구분

\* 채권양도 대항요건 간소화(§7), 저당권등 취득 특례(§8), 이익배당·자본변동 특례(§30) 등

#### < 예시 : 단말기할부대금채권 유동화 >





## 1. 등록유동화 증권 (자료 출처 : 금감원)

- (개황) '21년 상반기 등록유동화 증권(ABS : Asset-Backed Securities) 발행금액은 35.4조원이며, 발행잔액은 229.5조원

## &lt; 발행 추이 &gt;

구분	'18	'19	'20	'21.上
발행금액(연중, 조원)	49.4	51.7	79.1	35.4
발행잔액(연말, 조원)	186.0	190.8	219.0	229.5

- (유동화자산) MBS(61.4%), 기업매출채권(11.9%), 여신금융채권(11.2%), P-CBO(8.7%) 등 우량 집합채권 중심으로 발행

## &lt; 발행 현황('20년) &gt;

구분	대출채권		매출채권			P-CBO	계
	MBS	기업개인여신	여신금융 <sup>1)</sup>	기업 <sup>2)</sup>	부동산 PF		
발행금액(조원)	48.6	3.4	8.9	9.4	1.9	6.9	79.1
비중(%)	61.4	4.3	11.2	11.9	2.5	8.7	100.0

1) 신용카드매출채권, 자동차할부채권, 리스료채권 등

2) 단말할부대금채권, 항공운임채권, 휴대폰소액결제대금채권 등

## 2. 비등록유동화 증권 (자료 출처 : 한국예탁결제원)

- (개황) '21년 상반기 비등록유동화 증권(ABCP, AB단기사채, AB사채) 발행금액은 218.8조원이며, 발행잔액은 200.0조원

## &lt; 발행 추이 &gt;

구분	'18	'19	'20	'21.上
발행금액(연중, 조원)	337.4	403.9	418.7	218.8
발행잔액(연말, 조원)	154.4	189.9	189.5	200.0

- 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차환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유동화에 비해 발행금액은 크지만, 발행잔액은 비슷
- (유동화자산) 정기예금(52.0%)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, 부동산 PF(17.5%), 대출채권 유동화(11.0%)도 활발

## &lt; 발행 현황('20년, 잔액기준) &gt;

구분	정기예금	대출채권	매출채권	부동산PF	기타 <sup>1)</sup>	계
발행잔액(조원)	98.6	20.9	10.4	33.1	26.5	189.5
비중(%)	52.0	11.0	5.5	17.5	14.0	100.0

1) 회사채, 신용파생, 수익증권 등